

광주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찬반 논란 ‘시끌’

조합설립준비위 2개소 ‘과거·미래 공존 개발’ 주민 동의서 받기 추진 반대추진위 ‘문화공간 없애고 아파트라니...원주민들 쫓겨난다’ 반발

광주시 원도심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동구 동명동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명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이 들어서고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자, 이 일대 거주민들이 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동명동 일대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결사 반대, 업자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만 수역(원) 들어가고 업자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라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 블록 단위로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이른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동명동 일대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위 2개소가 생겼다.

먼저 동명동 179-10번지 일대 조합설립준비위는 9707.53㎡ 공간에 지상 26층 건물을 총 4개 동 세워 224세대 분양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연번부여 검인을 받았다.

또 동명동 181-14번지 일대 조합설립준비위는 9900.75㎡ 부지에 지상 20층 건물 총 5개 동을 짓고 200세대 분양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또

한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연번을 부여받았다.

18일 현재 이들 조합설립준비위는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주민 동의율 80%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설립준비위 측은 ‘동명동 일대는 동명로 남측 방향만 부촌이지 북측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나 빈 집이 많다’며 “동리단 카페거리에서 확대되는 상권을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서와 현수막을 내는 등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주지가 관광자화되면서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주민이 쫓겨날 위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 사업비가 증액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사업부지 일대에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부지 내 60㎡ 이하 토지 소유자는 일방적으로 땅을 조합에 팔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렸다. 이 토지 소유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데,



18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거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감정평가 등 일정 절차를 거친 뒤 조합이 해당 부지 매입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조합원을 탈퇴하기도 어려워져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내렸다. 도시정비법상 동의서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거기에 주민 80%의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 20% 주민은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반대추진위는 지적했다.

윤건중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최근 동명동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미술관과 정원 등 문화예술 공간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난데없이 일대를 전

부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니 황당하다”며 “조합은 사업성 판단을 잘 못하는 노년층 주민들을 현혹해 당장 동의서를 받아내는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설립준비위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 전후 추정 자산평가 금액과 비례율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했고,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설명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가 없으며, 동의서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조합 설립 시 재산상 이익이 되는 부분을 꾸준히 안내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회삿돈으로 도박·투자 34억 날린 회사대표

광주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도박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사공금을 날리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자금을 몰래 빼돌린 회사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으로 광주지역 도소매업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회사 공금 34억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권자들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국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도 정선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위험이 높은 선물 옵션에도 투자해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주주업체 대표인 A씨는 횡령으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지자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불하지 못했고, 결국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라 회사는 최근 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많은 액수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 이어 풍암호수서도 물고기 떼죽음...왜?

오염물질 유입 용존산소 급감 가능성 서구청, 9곳 물 채취 수질검사 의뢰

최근 광주천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광주일보 4월 17일자 6면> 데 이어 풍암호수에서도 물고기 200여마리가 연일 떼죽음을 당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 1목교, 2목교 인근에서 붕어 등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폐사한 물고기는 대부분 붕어로, 크기는 10cm 안팎이라고 서구청은 전했다.

서구청은 16-18일 사흘에 걸쳐 폐사체를 수거하고 1목교와 2목교, 3목교 인근 총 9곳의 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서구청은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과 14일 비가 내린 점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빗물을 타고 풍암지구-월드컵경기장 등 도로변에 쌓인 오염물질이 호수로 유입돼 순간적으로 오염 농도가 높아지면서 용존산소가 급격히 줄고, 결국 집단 폐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구청은 현재 풍암호수 외부 유입수는 빗물이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에서 폐사한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 제공>

유일하며, 빗물 유입 경로는 폐사체가 나온 1목교와 2목교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치평교 인근에 있는 광주천에서도 같은 이유로 붕어 200여마리가 폐사했다.

당시 서구청은 치평교로부터 하류 300m 지점까지 총 3곳의 하천수를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등 5가지 항목 모두 ‘적정 수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년 봄철이면 곳곳의 호수와 하천에서 빗물 때문에 폐사하는 물고기가 나오고 있다”며 “혹시 모를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 철저하게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풍암호수 정화장치와 물순환장치를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쿠팡 물류센터 신축 노동자들 “임금체불, 쿠팡이 해결해야”

쿠팡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시행사인 (주)쿠팡측에 직접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8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 쿠팡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현장을 책임지는 시행사로서 임금체불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측은 “광주시 평동3차 산업단지 내에 지난 2021년부터 지상 9층 규모로 건설중인 쿠팡물류센터 공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하는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로 인해 매일 3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2년 11월부터 원청에서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원청은 핑계를 대며

매월 임금지급을 미뤄 결국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임금체불이 60일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3월 말 기준 300여명의 노동자가 6억 9400만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측은 “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고, 시행사로 공사 발주자인 대기업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전문건설업체에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쿠팡물류센터는 총 공사비 1120억 원으로 평동 3차 산업단지내 연면적 16만81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 8명 기소

신안군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이날 전 삼성물산 직원 조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 등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하며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